

여건변화에 대응한 서천읍 공간구조 설정 방향

한 상 욱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hansw@cni.re.kr

이 연구는 서천군청사 이전에 따라 서천읍의 공간구조가 큰 변화를 겪을 것에 대응하여, 미래의 지역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서천군이 거점 공간별 특화기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서천읍 현황 및 여건
2. 서천군청사 이전에 따른 고려요인
3. 서천읍 거점별 특화 방향
4. 주요 거점별 계획과제

요약

- 본 연구는 서천읍내에 위치한 서천군청사가 2020년 서천읍 동측(구)서천역))으로 이전 결정함에 따라 군청사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기능 분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서천읍의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임
- 서천읍은 서천군 군청소재지가 위치하는 정주체계상 중심,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수부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고, 서천군청사의 이전은 서천읍 내부의 공간, 기능, 시설의 재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노령화,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지역개발 양상도 콤팩트화, 외연적 확산의 방지, 근린단위의 공동체성 증진, 기능의 복합·융합·연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서천읍은 주변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권은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본 연구의 내용은 이러한 서천읍에서 이루어지는 현황과 현상을 검토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서천군청사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청사인근 지역과 신청사 예정지역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전략을 제시함
- 또한,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서천읍의 기능 이탈 방지 최소화, 각 거점별 특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01 서천읍 현황 및 여건

1. 서천읍 현황

- [인구] 서천읍은 서천군의 인구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3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서천군, 서천읍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서천군의 인구는 2010년을 기점으로 2011년에는 인구 6만 이하로 하락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연평균 -0.6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서천읍은 서천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에 반하여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0%를 보이지만, 최근에는 서천읍의 인구도 하락 추세에 있음
 - 이러한 사유는 고령화, 도시화의 영향속에서 인접 읍면으로부터 서천읍으로의 인구 이동과, 군산시로의 인구 이탈과 직주분리 현상에 의한 것으로 예상됨
- [세대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세대의 다양화, 세분화 및 주변 주거이동에 따른 현상
 - 주거이동의 측면에서는 주변지역의 인구가 서천읍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

서천군, 서천읍의 세대수, 인구수 변화

구분	서천군		서천읍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서천군 대비 비중	인구수	서천군 대비 비중
2008	25,841	60,507	5,157	20.0	13,414	22.2
2009	26,149	60,066	5,282	20.2	13,539	22.5
2010	26,753	60,085	5,698	21.3	14,287	23.8
2011	26,638	59,541	5,784	21.7	14,629	24.6
2012	26,612	58,920	5,861	22.0	14,670	24.9
2013	26,663	58,441	5,928	22.2	14,760	25.3
2014	26,670	57,713	5,984	22.4	14,735	25.5
2015	26,622	56,910	6,027	22.6	14,656	25.8
2016	26,583	57,245	6,026	22.7	14,527	25.4
연평균 증가율	08-11	1.02	-0.54	3.90	2.93	
	10-16	-0.04	-0.78	0.82	-0.14	
	08-16	0.35	-0.69	1.97	1.00	

자료 : 서천 통계연보, 매년

- [지역발전지수] 서천군의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30%에 속하는 저발전지역으로, 낙후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우리나라 대부분의 낙후지역은 인구, 재정, 소득지표에서는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주민의 문화·복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전국 순위에서 일정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아동복지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서천군 지역발전지수 변화

구분		2008					2014					2014-2008				
		전국 평균	충남 평균	서천군	전국 대비	충남 대비	전국 평균	충남 평균	서천	전국 대비	충남 대비	전국 평균	충남 평균	서천	전국 대비	충남 대비
영양 증가율	값 순위	-0.160	0.188	-0.021 141	0.139	-0.210	0.484	0.324	-0.650 130	-1.134	-0.974	0.644	0.136	-0.629 11	-1.273	-0.764
고령 인구율	값 순위	17,303	17,753	25,266 131	7,964	7,514	19,465	19,963	28,940 136	9,475	8,977	2,162	2,211	3,674 -5	1,511	1,463
조출생률	값 순위	8,613	8,547	5,999 144	-2,614	-2,548	7,608	7,593	5,100 143	-2,508	-2,493	-1,005	-0,954	-0,899 1	0.106	0.055
사업체수	값 순위	10,590	8,222	4,425 98	-6,165	-3,797	12,065	9,414	4,505 97	-7,560	-4,909	1,475	1,192	80 1	-1,395	-1,112
영양 증가율	값 순위						4,223	4,771	1,527 132	-2,695	-3,243	4,223	4,771	1,527 -132	-2,695	-3,243
고용기회	값 순위	63,529	67,656	72,888 56	9,359	5,232	0,542	57,051	58,920 58	58,378	1,869	-62,987	-10,605	-13,968 -2	49,019	-3,363
인당 소득	값 순위	30,523	34,533	18,919 119	-11,604	-15,614	122,425	156,449	78,055 97	-44,370	-78,395	91,901	121,917	59,136 22	-32,766	-62,781
재정 자립도	값 순위	25,939	25,084	12,430 130	-13,509	-12,654	24,150	22,311	12,200 125	-11,950	-10,111	-1,789	-2,773	-0,230 5	1,559	2,543
신규 주택비율	값 순위	69,685	28,796	36,669 111	-33,016	7,873	19,338	18,662	24,960 106	5,622	6,298	-50,347	-10,134	-11,709 5	38,638	-1,575
공공 기관	값 순위	0.173	0.092	0.098 62	-0.075	0.005	0.179	0.093	0.095 61	-0.084	0.002	0.005	0.000	-0.003 1	-0.008	-0.003
사립 기관	값 순위	1,976	1,803	1,669 98	-0.307	-0.134	1,172	1,129	1,150 78	-0.022	0.021	-0.804	-0.675	-0.519 20	0.284	0.156
의료인 수	값 순위	1,150	0,896	0,287 109	-0.863	-0.609	4,676	4,438	5,202 56	0.526	0.764	3,526	3,542	4,915 53	1,389	1,373
병상 수	값 순위	1,690	1,291	1,009 82	-0.681	-0.282	12,425	12,726	20,230 22	7,806	7,504	10,735	11,435	19,221 60	8,486	7,786
아동복지 기관	값 순위	5,118	4,926	5,838 47	0.720	0.913	16,770	17,769	16,730 68	-0.040	-1,039	11,652	12,844	10,892 -21	-0,760	-1,952
노인복지 기관	값 순위	19,043	19,423	18,380 87	-0.662	-1,043	0,859	0,698	0,921 37	0.062	0.224	-18,184	-18,726	-17,459 50	0.725	1,267
문화·체육 시설	값 순위	0.068	0.045	0.050 76	-0.019	0.005	9,731	8,800	4,000 140	-5,731	-4,800	9,663	8,755	3,950 -64	-5,712	-4,805

주) 2008년은 전국 163개, 2014년은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순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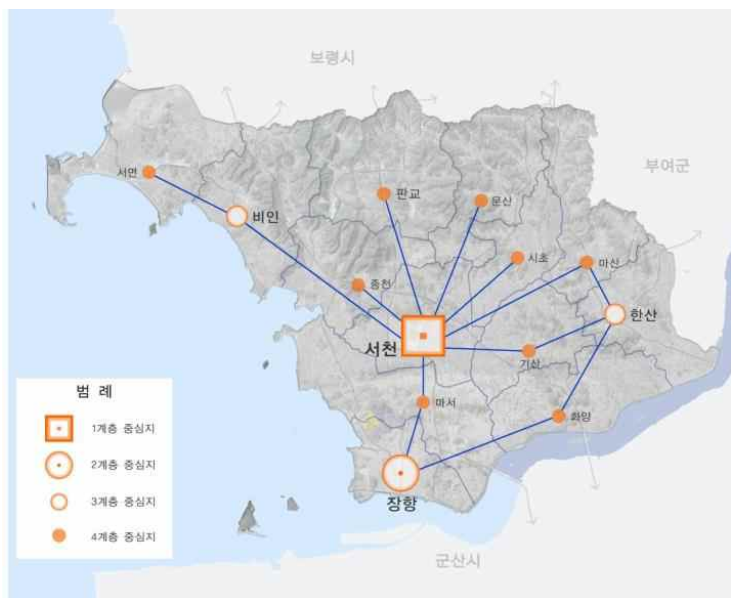
자료 :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 [기능지수] 서천읍은 서천군내에서 중심성 비중이 52.38%에 점하는 1계층 중심지임
 - 기능지수에 의한 중심성은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크기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영업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계층은 정주생활권상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함
 - 서천읍은 중심지 기능지수상 1계층에 속하며, 중심성 비중은 52.38%로 서천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 서천군의 전체 기능지수가 전국적인 도시화 추세에 따라 하락하는 상황에서 서천읍이 담당하는 기능은 고차서비스 기능이 아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저차서비스라는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주체계가 개방형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생활권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고, 서천읍은 인근 비인, 판교, 마산, 서면, 문산, 기산, 종천, 마서, 시초를 배후로 하는 중심지임

서천군의 중심지 계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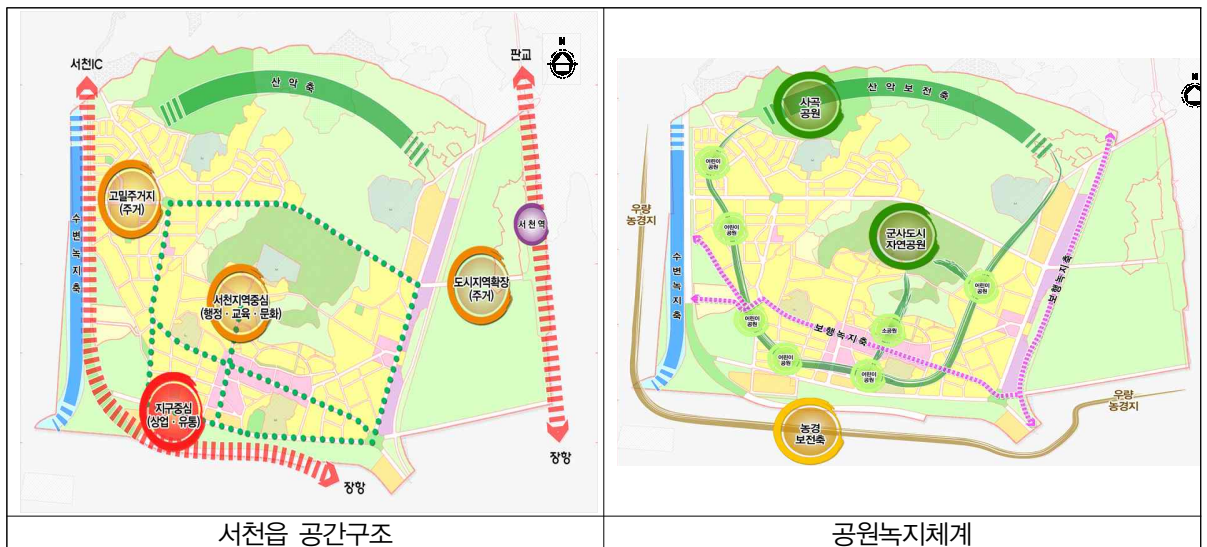
구분	중심지 기능지수	계층	중심성 비중
서천읍	3,666.67	1	52.38
장항읍	2,021.52	2	28.88
한산면	466.08	3	6.66
비인면	287.69	3	4.11
판교면	174.21	4	2.49
마서면	97.98	4	1.40
서면	85.84	4	1.23
문산면	50.32	4	0.72
기산면	37.87	4	0.54
종천면	32.24	4	0.46
마산면	29.46	4	0.42
화양면	25.16	4	0.36
시초면	24.95	4	0.36

서천군 공간구조



자료 : 서천군(2016), 2025 서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 [공간구조] 행정, 교육, 문화중심기능을 담당토록 계획되었으며, 서천특화시장 및 인근 상업지역으로 상업, 유통기능 거점이력으로 설정
 - 제4개의 중심지중 서천역사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 확장하여 주거지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음
 - 구)서천역 인근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서천역과 기존시가지의 연계강화 및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관리체계를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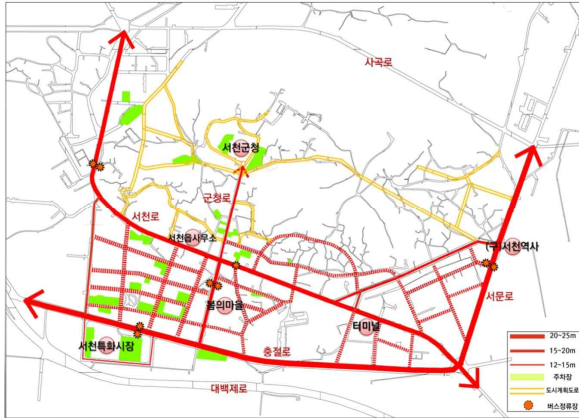
-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7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서천도시지역은 3.2km²이고, 미개발된 도시지역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로 향후 새로운 기능 유치시 개발압력이 높을것으로 예상
 - 서천군의 도시지역은 기지정된 도시지역은 쇠퇴내지 담보상태에 있음
 - 서천읍의 토지는 전체 도시지역의 15.3%이며, 정채된 상태에 있음
 - 한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가 2.763km²가 지정되어 있고, 미개발상태인 점을 감안 하면, 향후 새로운 기능의 유입시 개발압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서천읍 용도지역] 서천읍의 용도지역 은 주거 33.2%, 상업지역 2.4%, 공업지역 1.7%, 녹지지역 62.7%이며,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99,612m²임

구분	위치	면적(km ²)	비중(%)	비고
계	-	20,873	100%	
서천도시지역	서천읍 사곡리, 군사리, 화금리 일원	3,200	15.3%	정체
장항도시지역	장항읍 신창리, 창선라, 장암리, 화천리, 송림리, 옥산리, 성주리, 원수리 일원	9,676	46.4%	미활용 토지 잔재
비인도시지역	비인면 성내리 일원	2,410	11.5%	쇠퇴
한산도시지역	한산면 지현리 일원	1,571	7.5%	쇠퇴
판교도시지역	판교면 현암리 일원	0,863	4.1%	쇠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장항읍 화천리, 마서면 옥남리 일원	2,763	13.2%	미조성
서면화력발전소	비인면 마량리 일원	0,39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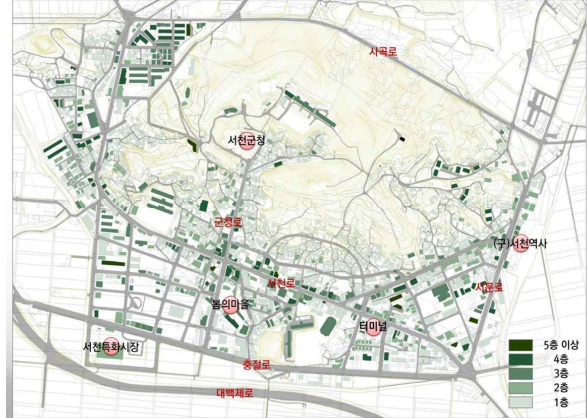
주) 사용된 자료가 과거자료로서 현재 도시관리계획과 다를 수 있음
 자료 : 2020년 서천군 관리계획(2014)

- [가로 주변으로 발달된 상업시설의 입지] 서천읍은 과거 가로에 접한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고, 일련의 토지이용이 혼재된 형태를 취함
 - 서천읍의 골격은 서천로와 충절로가 도시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천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입지하고, 서천특화시장은 충절로와 연결한 형태임
 -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시화 정도를 가늠하는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이 4층이하의 건축물이 서천로를 중심으로 입지하며, 서천읍 서측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입지함
 - 건축물의 용도적 측면에서도 서천로, 충절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입지하고, 그 후면에 주거지역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취락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비분화된 도시구조를 갖고 있음
 - 한편, 공공시설적 측면에서는 교육, 안전, 행정, 교통시설이 서천읍전체에 산포하고 있으며, 시설의 집약도, 집중이용도는 낮다고 할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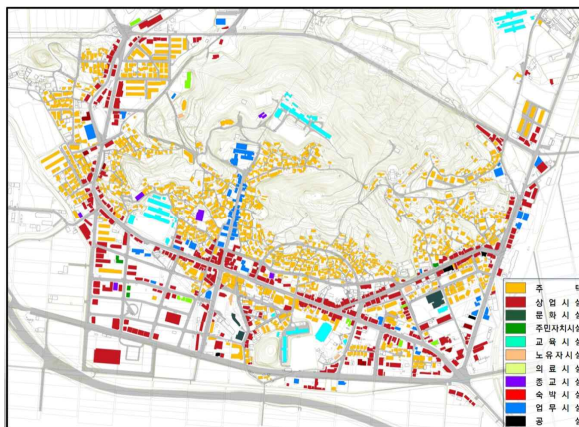
서천읍 주요 현황



교통체계



건축물 층수



건축물 용도



공공시설물 분포

자료 : 서천군청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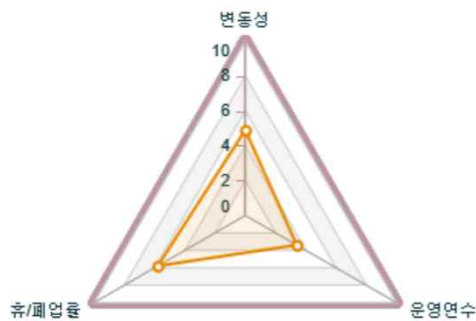
- [상권 지수] 반경 500m내의 저밀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중심의 기초 상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통접근성은 유리하나 성장성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경기가 하락 추세에 있음
 - 상권평가등급은 50.2점으로 증가요인과 성장성이 저하되고 있고, 성장성 10점, 안정성 9.6점, 영업력 9.1점, 구매력 8.5점, 집객력 13.0점으로 구매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성장성 측면에서는 매출 성장률이 4.7/10점, 상권 매출비중이 3.0/5점, 예상성장률이 2.4/5점으로 현재 매우 침체되어 있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임
 - 안정성 측면에서는 변동성은 4.9/10점, 운영연수 1.7점/5점, 휴폐업률은 2.9점/5점

- 영업력 측면에서는 공급대비 수요는 4.1/10점, 점포별 매출편차 2.5/5점, 기간별 매출편차 2.4/5점
- 구매력 측면에서는 매출규모 1.9/7.5점, 건당 이용단가 4.1/7.5점, 상주인구 유입비중은 2.4/5점
- 집객력 측면에서는 유동인구 7.2/10점, 배후 주거인구 2.9/5점, 배후 직장인구 2.8/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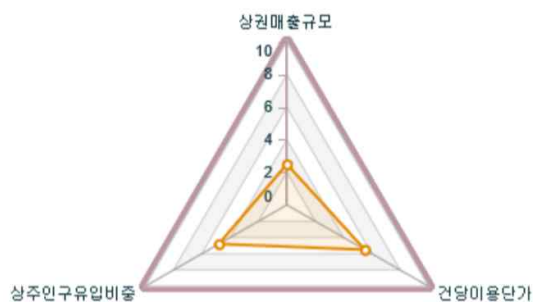
서천읍 상권 평가



상권평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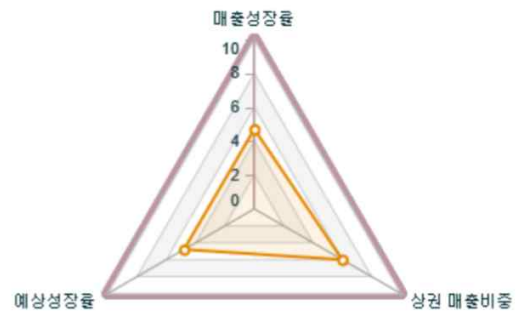


안전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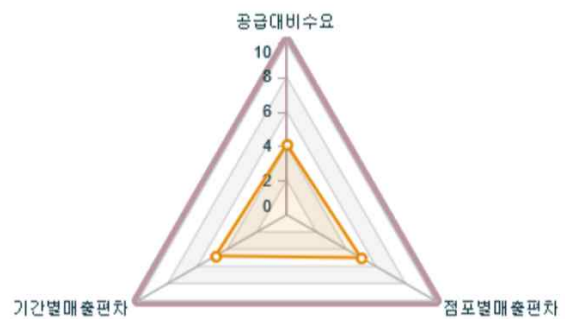


구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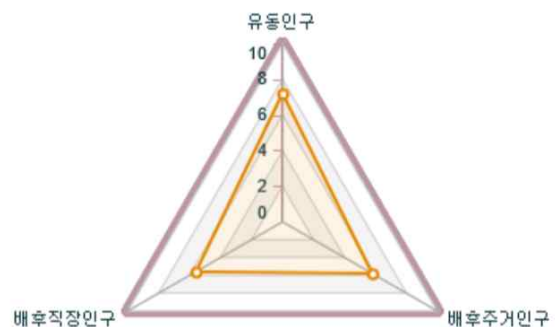
출처 : 상권정보시스템(2017.4)



성장성지수



영업력지수



집객력지수

2. 여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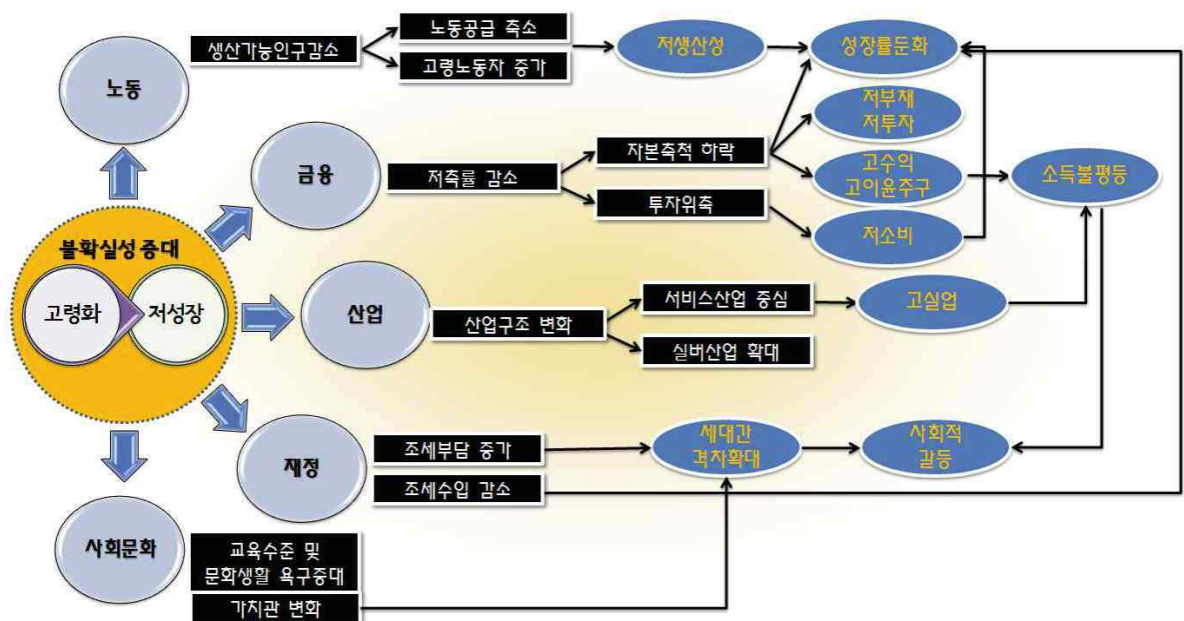
1) 서천읍의 변화 동향

- 인구 감소시대 전개, 서천읍의 정주인구도 감소 추세 지속화 예상
 - [자연감소현상 지배적] 서천군의 인구 관련 특성은 노령화로 인한 사망과 출산률 저하로 인한 자연감소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 현상이 두드러짐
 - [서천읍의 인구이탈 현상 발생] 한편, 과거에는 서천읍을 둘러싼 연접지역에서 서천읍으로의 인구이동이 나타나서 서천읍 인구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인구 이탈 현상이 전 읍면에서 진행됨에 따라 서천읍의 인구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인근 군산시로의 인구 유출은 부동산의 가치분 능력이 있는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서천읍에는 상대적 빈곤층이 자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서천읍 상권은 반경 500m내 밀집한 소규모 상권이며, 상권의 지속적인 쇠퇴와 기초생활서비스 중심으로의 명맥 유지
 - 서천읍은 교통적 접근성은 우수하여, 집객력은 높은 반면, 이외의 나머지 상권평가 지표에서 중하위에 속하고, 그 경향 또한 지속적인 하락 추세
 - 서천읍의 상권기능은 저차의 음식, 소매업에 집중되며, 중고위의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새로운 활력을 이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높음
 - 상대적 발전지수의 평가시 저발전지역에 속하고, 국내 전반의 사회·경제적 흐름에 견주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의 부동산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함

2) 대외적인 여건변화

- [인구 감소시대 전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시대, 더 나아가서는 인구 절벽시대를 예견하고 있음
 - 인구 과소화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중 하나인 가임기여성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와 이를 가혹화 시키는 초고령화에 따라 지방 소멸론이 대두
 - 서천군도 지방소멸 위기에 속하며,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자체의 운영이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이 불안감 가중

저성장시대의 특성



자료: 김선기외(2012),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추자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p.29

- [대도시,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 이동도 양극화] 농어촌지역에서 대도시, 신도시 중심의 인구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공간거리의 한계를 넘어선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
 - 지방의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중의 하나가 세대간, 계층간의 양극화와 더불어

지역간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

- 과거의 수도권 집중도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부터 발생하고, 영·호남은 그 이동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현재는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영·호남도 동일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지방은 지방내에 있는 도시화, 규모화된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이할만한 점은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데에 있음
 - 이것은 서천군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인구 이동 형태에도 동일한 추세인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시공간거리 단축은 서천군 전체적으로 군산시로의 인구이동이 나타나고, 서천읍이 현재까지 주변 연접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함
- [압축성장기, 고도성장기의 후유증] 고도성장기 후에 나타나는 빈집의 증가, 지가의 양극화, 신규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에 따른 경쟁력없는 지자체의 속출
 -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인구의 집중에 따라 주택, 서비스 등에 대해서 증가하였고, 지자체는 일정수준 공공시설과 인프라를 정비하여 지자체간 서비스의 차이가 별로 없었음
 - 인구감소로 인하여 빈집 증가, 지가 양극화 등은 대도시나 서비스 편리성이 높은 시가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만, 인구감소와 함께 약세인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물적, 비물적 서비스 수준이 현재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로 인하 공공시설의 정비를 기민하게 갱신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으나 한정된 자원 아래서 신축성있게 실시하기에는 지자체의 여건이 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 [투입재원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 치열] 과거 중앙의존적 시각에서 탈피한 재정투입의 투명성, 효율성이 전제된 지자체의 책무를 묻는 형태로의 전환
 - 일본의 경우, 일본 총인구는 2010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10% 감소하고, 다른 도시권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총인구는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문제가 심각한 곳은 지자체로 약 40%-5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일본 지역별 장래 추정인구, 2013)

- 우리나라도 유사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과소화된 지자체가 그 체제 유지가 한계에 다다를 경우, 지금까지는 중앙에 의존하면 중앙이 나서서 무엇이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존적 시각이 존재하였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재정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겪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시각은 이미 일본에서 지방의 자율권, 자립권을 기반으로 한 인식이 전개되고 있음
- 한편, 지방의 체제를 유지하는 지방교부세(금)에 의한 지원도 그 하한선이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면서, 지방교부세(금)의 개선(폐지)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음¹⁾

● [공공의 영역 확대] 공공의 영역에서 투입하여야하는 순수 공공재와 준공공영역의 확대에 따른 공공의 경직성과 서비스 효율성·효용성 사이에서의 관계정립 요구

- 공공과 사적 영역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서 공공은 순수공공재와 준공공재의 영역으로 나뉘고, 이중 준공공재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 예상
- 공공재의 역할은 형평성, 경합성 측면에서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하는 영역으로 시장경제에서는 제공할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영역을 일컫는데, 이러한 공공재는 비용과 편익사이에서 편익이 우선한 형평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임
- 그러나,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세분화된 양상은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경합을 유도하고, 지출을 부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공공시설 서비스의 한계효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공공시설이 정비되는 과정, 추가적으로 조성·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 다시 말해, 대체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고, 요구도는 증가한다는데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방이전재원이 2015년 119.4조원, 2016년 123.3조원, 2017년 134.0조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 지방교부세가 40.7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9조원 지출되었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지방에서도 이러한 재원이 과거부터 SOC 투입에 이루어져 비효율적인 재정구조를 발생하였다고 지적함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가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작용할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재원이전시 지방재정 사업의 내역이나, 중복여부, 집행의 효율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정책이 지자체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며, 지방재정의 건정성 강화, 투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을 말함

02

서천군청사 이전에 따른 고려 요인

1. 서천군청사 건립 개요

- 기존 청사 노후도, 서비스 면적 협소 등에 따라 청사 건립
 - 현재 본관동, 후관동, 별관동 후별관동, 식당동의 안전진단 결과 B-D등급으로 양극화 문제, 유지관리비용 과다 문제 발생
 - 현청사 연면적 5,057㎡으로 필요한 소요면적 11,193㎡의 45.8%에 달해 주민 불편, 업무 효율이 저하
- 건축연면적 약 11,200㎡, 약 350억원 공사비로 설정하여, 구)서천역사부지로 이전 결정
 - 건축연면적 : 약 11,200㎡(군청사 약 9,400㎡, 의회 청사 약 1,800㎡)
 - 소요 주차대수 : 400대, 주차장 면적 12,000㎡소요
 - 소요 부지면적 : 27,500㎡(용적률 40% 가정, 건폐율 10%, 도로, 주차장 45%)
 - 총공사비 : 350억원(건축비 300억원, 부지조성비 50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2. 군청사 입지선정 관련 주요 의견²⁾

1) 주요 내용

- 도시환경, 정책, 트렌드의 변화
 - 도시환경과 공간정책의 재생적 전환 : 서천읍 도시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역사, 문화, 경제, 산업, 생활 등의 요소들과 결합, 융복합된 지여공간, 산업, 자원의 입체화 도모
- 도시적 특성과 전제사항
 - 서천읍의 읍세를 고려할 경우 군청사 자체 기능의 충족과 더불어 전체 도시공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특히, 도시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 현 청사부지의 역사경관적 가능성을 고려한 역사문화적 가치, 자원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와 도시활성화 자원으로 활용
 - 충분한 논의와 동의 과정을 통해 사전에 주민 여론의 분열, 갈등관계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고,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필요

2) 도시활성화 측면의 검토 요소

- 군청사 이미지 제고 효과
 - 구 서천역사 부지로 이전시 군청사 건축물의 물리적 인지성 제고로 서천읍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고, 연계된 편의성 확보는 가능
-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적절한 공공개발 사업 수요가 없어서 주변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대규모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2) 이하 내용은 서천군청사 건립방향 전문가 자문보고서(2015.4)을 요약정리

- 잠재적 도시활성화 요소와의 연계성
 - 대상부지 내부적으로 대백제로, 충절로, 서문로를 중심으로 한 성격개발전략이 마련될 경우 소지역별 역할분담은 가능하고, 외부적으로 외곽축 형성은 가능
-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 군청사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은 국부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외곽축 개발전략을 추진하더라도 활성화 동력 확보는 의문
- 이전적지 대체기능 확보 가능성
 - 이전적지의 대체기능 확보 어렵고, 역사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추진일정 고려시 주변지역 장기 침체 우려
- 서천읍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비전과의 통합성
 - 장기적으로 서천읍성 복원사업, 읍성과 연계한 주변지역 역사경관 가꾸기와 연계한 서천읍의 미래 비전 구축 가능성 존재

3. 기관이전 영향 검토

- 단순히 군청사 건립이라는 시각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기관의 이전이 결정된 상황을 고려할 경우 그 영향의 유무와 크기를 종합적으로 검토, 진단하기 위해 다분야에 걸친 틀을 제시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사 건립 추진관련 전문가의견이 도시환경적인 부분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검토 범위를 확장함
- 2017년 이전에 이루어진 논의는 대부분 건립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전에 따른 다른 기능의 대체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는 “순수유출효과”와 이전적지 또는 건물이 다른 기관 및 민간에 의해 활용될 경우에 의한 “이전 대체효과”로 구분함³⁾
-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 외 기관이전이 대부분인바, 이를 종합하여 주요 관련 요소들을 검토하고, 서천읍의 적용성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괄적인 흐름과 적용가능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 순수 유출 영향

- 인구 주택에의 영향
 - 인구 : 공공기관의 외부 이전시 직간접적인 종사자, 동반가족등을 고려하여 유출인구, 장래인구 추계 등을 활용
 - 서천읍은 외부 유출이 아닌 읍내에 입지함에 따라 인구의 외부유출효과와의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주택 : 공공기관의 외부 유출시 발생하는 종사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의 처분권, 공공의 주택공급과의 관련성,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 등을 판단
 - 서천읍은 부동산의 소유 처분권,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직접적인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

3) 이하 검토틀은 서울시(2013),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 및 분야별 대응전략연구를 차용하여 보완함

- 산업경제 영향

-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등의 증가율을 검토하며, 연관산업 종사자의 감소를 고려한 고용량을 판단

→ 외부 유출에 따른 침체보다는 서천읍 전체, 서천군 전체의 건설효과에 따른 제고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도시공간 영향

- 인구 유출에 따른 생산 감소와 기존에 집적되어 있던 고용,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 기관이전으로 인한 서천군의 인구유출이 없기 때문에 총량적인 영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단, 국지적으로 기능의 이전에 따른 연접지역의 기능 이전, 관련기능의 동반이전은 고려 대상임

- 교통 영향

- 보통 외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내의 교통영향보다는 지역내와 이전기관간의 내외부적인 광역간, 지역간 통행변화가 발생하고, 단기적으로는 업무통행의 증가, 가족 일부의 행동에 따른 주말교통수요의 증가로 나타남

→ 서천군은 외부와의 교통이전 보다는 내부적인 교통 접근성의 변화로 인하여, 내부의 교통 유동량 변화에 따른 기능, 시설의 입지가 변화할 것으로 판단

2) 현청사부지 기능 재투입시 영향

- 기관 부지 소유형태별 활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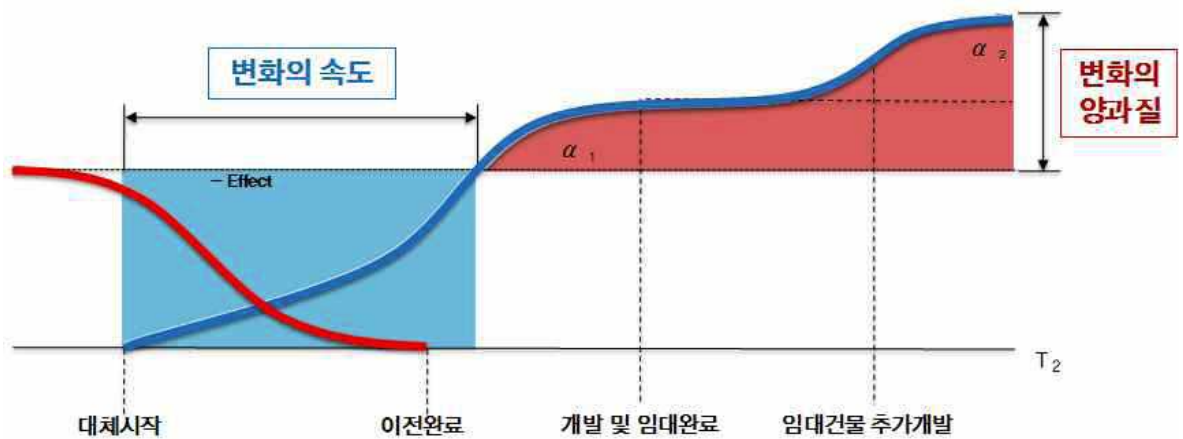
- 3개의 유형 : 국공유자산, 건축물(일부)의 법인자산, 민간 건축물 일부 임차

- 국공유자산 : 공공기관 청사로 재활용 형태가 일반적이며, 직접 유출과 동시에 직접 유입효과를 발생하여 그 효과는 상쇄됨. 다만, 유출기관과 유입기관의 기능적 차이로 인한 간접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동종 업종내에서의 전환이므로 그 파급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움

- 법인 자산 : 이전 부지 충당을 위한 매각 진행하는 형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용도로 재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임

→ 서천군의 경우, 최대한 동종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되,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연관지수상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과 기관이 유입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기관이전으로 인한 단계별 영향



자료 : 서울시(2013),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p4

4. 현 군청사부지 활용 대응방향

1) 파급효과별 대응방향 설정

구분		주요내용	방향
순수 영향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의 외부 유출효과와의 관련성 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인구 유입관련 가능성 검토 및 일부 시설 집적화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로 인한 외부 유출효과 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현군청사 주변 주거환경 개선 및 외부유출 최소화
	산업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연관산업 효과는 미흡 건설경기로 인한 외부효과는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경기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안 마련 현상권의 기능 이전을 막기 위한 이전 부지의 토지이용의 제한 및 현상권의 기능 고도화
	도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고용 및 경제규모상의 총량적인 영향은 빈약 단, 현)서천군청 주변의 기능 이전, 관련기능의 동반 이전 고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 이전이 유력시되는 현)군청 주변 입지 건축물에 대한 활용 대안 마련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간 교통량 변화, 주말교통량 증가수요는 현행 유지 내부 교통 발생 거점의 변화, 접근성 측면의 유동량 변화에 따른 기능, 시설 입지는 이동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량 발생 거점 기능 유치 현)군청사와 남측 상권간의 보행량 증대 방안 마련
간접 영향	공공기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 이탈에 따른 대안기능 유지로 직접유입효과를 발생하여 효과 상쇄(단, 동종업종내에서의 전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이 가능한 (준)공공기관 유치 새로운 기능의 유치
	민간자본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기능 유지를 위한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민간 자본 유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본 유치 활동 확대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매각시 책임성 문제 대두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진

2) 추진 방향

- 서천읍 도시공간구조의 맥락과 연계된 지역의 상징성 강화
 - 단순한 공공시설물의 설치로 그치지 않고, 차별성이 확보된 다목적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단지 개발
 -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현 청사부지에 독특한 디자인하고, 구도심을 상징성을 갖춘 장소로 개발
- 현 청사 부지는 문화재 관련 법적 제약요인 극복과 공공용지 추가 매입을 통한 토지이용의 극대화
 - 현 청사부지의 활용성은 문화재관련법에 따라 매우 제약적인 바, 연접부지활용을 적극 검토
 - 새로운 기능 이입시 관련 연면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상 연접부지를 최대한 확보
- 동일 공공기능, 민간기능의 이입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건축물의 유지관리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고정 지출비용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지원 대안 마련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능형의 건축물 마련
- 기능 유출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 차원의 대안 마련
 - 재생차원에서 시설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
 - 기존 상권과 연접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 공간조성시 대규모의 건축물은 지향하고, 차별화된 중소 규모의 공간 도입하여 운영하며, 공공, 상업,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 창출하여 주민의 유동량 확보
 - 주민에게 친근감과 휴식의 있는 매력적인 커뮤니티 공간 제공
 - 특히, 주간에 서천읍을 찾는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예 : 전시·홍보실, 도서관, 카페, 휴게실 등)
 - 문화기능을 겸비한 복합 공공시설로 개발(예, 문화센터, 도시숲, 전시관, 상업시설 등)

03

서천읍 거점별 특화 방향

1. 기본 방향

-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위기 의식에 대응하고,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교육, 의료, 보육 등 기본 정주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저성장과 뉴노멀의 상시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특성화를 지원하는 기능의 적극적 투입
 -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저성장체제로 전환과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
- 축소도시에 대응한 압축(Compact) 개념의 적극적인 도입과 내부 공간간의 네트워크화
 -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수요와 신규 개발수요의 감소는 상업시설, 공실률 증가, 공공시설의 이용률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위해서는 각 공간별 기능과 시설을 특성화하고, 각 기능은 복합화를 추진하여야 함
 - 각 거점공간과 거점공간간은 안전성·쾌적성이 확보된 공공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며, 각 거점공간간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함
- 인구, 생활권 규모에 적합한 문화, 복지 등 주민수요 증가시설에 대한 적정 배치로 공간효율의 극대화
 - 과거 성장중심의 도시공간은 한계를 맞고 있으며, 인구 전반적으로 고령화됨에 따라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전망됨
 - 반면,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교원 및 학교시설 공급이 과잉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

2. 적정 공급기준 설정을 위한 예비검토

- 우리나라의 부처별 서비스 공급기준은 인구감소시대를 고려하지 않는 공급기준으로서 생활서비스의 적정공급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본 연구에서 한계가 있음
 - 한편, 국제법에 의거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장래 도시성격과 범위, 토지이용, 기반 시설 공급 등에 대한 물리적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 추정을 과다하게 설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과다공급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적정 공급기준을 설정하는데에는 한계
-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영역은 중심지와 더불어 중심지 세력권에 포함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 세력권에 포함되는 곳에서는 시설의 과다 공급을 지양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이동거리의 광역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현재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를 반영한 사항임
 - 읍면별로의 폐쇄적인 공간구조에 맞추어 기능을 설정하고, 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더 이상 그 효율성, 효용성이 문제가 나타나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심지-배후마을간의 공급서비스 영역의 체계화와 서비스 품질의 고도화를 고려하여야 함
- 서천읍은 독일의 사례⁴⁾에 견주어 중위와 하위의 중심지에 속하며, 중위중심지는 서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시설, 하위중심지는 서천읍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시설로 구분이 가능함
 - 서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광역시설로서 그 규모면에서 근린단위의 서비스 규모보다 월등하며, 그 유지관리 비용에 문제를 안고 있음
 - 서천군에서 이루어지는 분야는 교육, 청소년, 문화, 스포츠, 보건사회, 교통시설로 크게 나뉘며, 이를 구체화한 내용과, 시설공급을 위한 제반 근거법 및 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 서천읍은 서천읍 중심지로부터 반경 500m안에 대부분의 시설이 공공서비스시설이 밀집 집적되어 있고, 도보 10분내에 필요한 시설로는 교육, 청소년시설의 보완, 박물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의 서비스 공급, 생활체육(실내체육시설)중심의 수요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⁵⁾
 - 이러한 판단은 이용우외(2014)에 의하면 도보 10분내 필요한 시설로 2040년에는 의

4) 아래표 참조

5) 기술된 내용은 작성자의 경험적 판단에 의거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요, 공급을 고려치 않음

료공간, 휴식공간, 생필품가게, 금융공간, 초중고등학교, 대형할인마트, 공공행정기관, 음식점, 실내건강공간, 체육시설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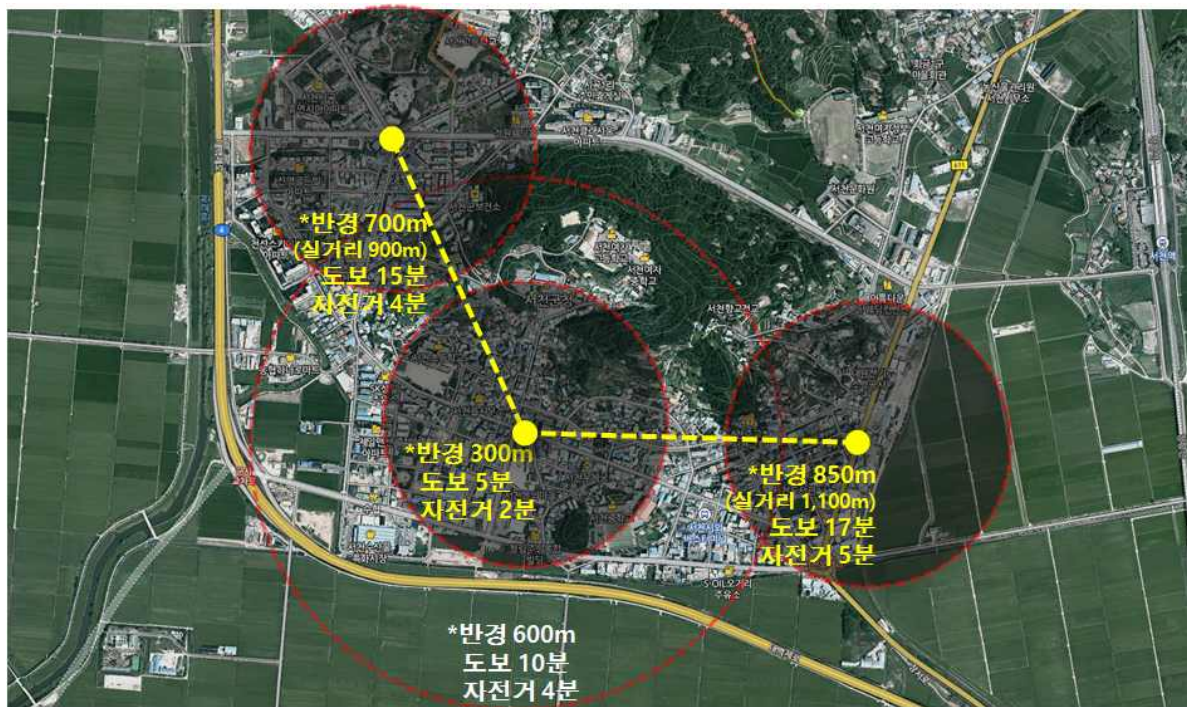
- 2014년 대비 2040년에 새롭게 필요로 하는 시설은 의료공간, 대형할인마트, 체육시설임
- 2014년 대비 2040년에 필요치 않는 시설은 카페, 육아공간, 오락공간임

도보 10분내 필요시설

구분	생필품가게	초중고등학교	음식점	카페	실내건강공간	육아공간	휴식공간	금융공간	공공행정공간	오락공간	의료공간	대형할인마트	체육시설
2014	1	2	3	4	5	6	7	8	9	10	-	-	
2040	3	5	8	-	9	-	2	4	7	-	1	6	10
순위	△2	△3	△5	후퇴	△4	후퇴	+5	+4	+2	후퇴	신규	신규	신규

자료 : 이용우외(2014), 미래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 국토연구원

서천읍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의 생활서비스 표준

구분	소중심지	하위중심지	중위중심지	상위중심지	비고
인구수	1,000명 이상	3,000명 이상	20,000이상	100,000이상	
중심지세 력권 인구수	최소 5,000명 이상	최소 7,000명 이상	최소 35,000명 이상	최소 200,000명 이상	
교육 청소년 시설	· 초등학교 · 유치원 · 청소년 센터	· 중고등학교 · 전학년개설 초 등학교 · 사회복지사 자 격자 운영 유 소년 여가시설	· 정신장애자를 위한 학교 · 시민대학 · 음악학교 · 교육보조센터 · 청소년 센터 등	· 대학 · 전문대학 · 각종 장애자 학교 · 직업학교	민간영역, 청소년관련 영역의 수요 증가 예상
문화 시설		· 강당 · 도서관	· 다목적 강당 · 영화관 · 박물관 · 도서관	· 극장 · 회의장/콘서트 홀 · 다수의 박물관 · 학술 도서관	박물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의 서비스 증가 예상
스포츠 시설	· 대소의 운동장 · 스포츠 시설	· 학교 스포츠 시 설(육상기능) · 체육관 · 대소의 운동장	· 관중석구비 스 포츠시설 · 대운동장 및 육상시설 · 관중석 구비 체육관 · 테니스장 · 수영장	· 관중석 구비 스타디움 · 기타 여러 스 포츠 종목을 위한 특성 시 설	생활 체육,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보건 사회 시설	· 의사 · 약국	· 다수의 의사	· 정규 및 기초 진료 가능 병 원 · 전문의 · 공공보건시설 · 양로원 · 각종 장애자 시설	· 중환자진료병 원 · 전문 클리닉 · 다수의 전문의	
기타 서비스 시설	· 기초수요 소매 점 · 우체국 지소 · 은행 출장소 · 음식점	· 양질의 기초수 요를 위한 소 매점 · 우체국 · 은행지소 · 음식점	· 고차 수요를 위한 구매 및 서비스점 · 호텔 · 금융기관 지부	· 백화점 · 고차전문수요 를 위한 대형 소매점 · 은행 및 금융 기관	
공공기관	· 행정사무소		· 하위 주관청 또는 지법	· 상위 주관청 및 주법원	
교통시설	· 연방 및 주교 통로와 연계 · 공공교통수단 과 연계		· 연방 교통로와 직접 연계 · 철도와 연계	· 연방고속도로 와 연계 · 철도 정치역	

자료: Land Brandenburg, 1995, Landesentwicklungsplan Brandenburg: Zentraloertliche Gliederung LEPI, 10-11. 한국지
방행정연구원(2008)에서 재인용

생활서비스별 계획 및 관련부처 현황

구분		관련계획	관련부처	근거법
교육	평생교육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부	평생교육법
	지방대학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도서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문체부	도서관법
의료	응급	응급의료기본계획	보건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부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부	지역보건법
문화	다문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문체부	지역문화진흥법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문체부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문체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체육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복지	청소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여가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영유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부	영유아보육법
	고령화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보건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보건부	장애인복지법
		자활지원계획	보건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보건부	장애인의 노인 인식분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노인등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건부	사회복지사업법
경제	여성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사회적경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고용부	사회적 기업육성법
	전통시장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중기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거	주택	주택종합계획	국토부	주택법
	주거	주거종합계획	국토부	주거기본법

주)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을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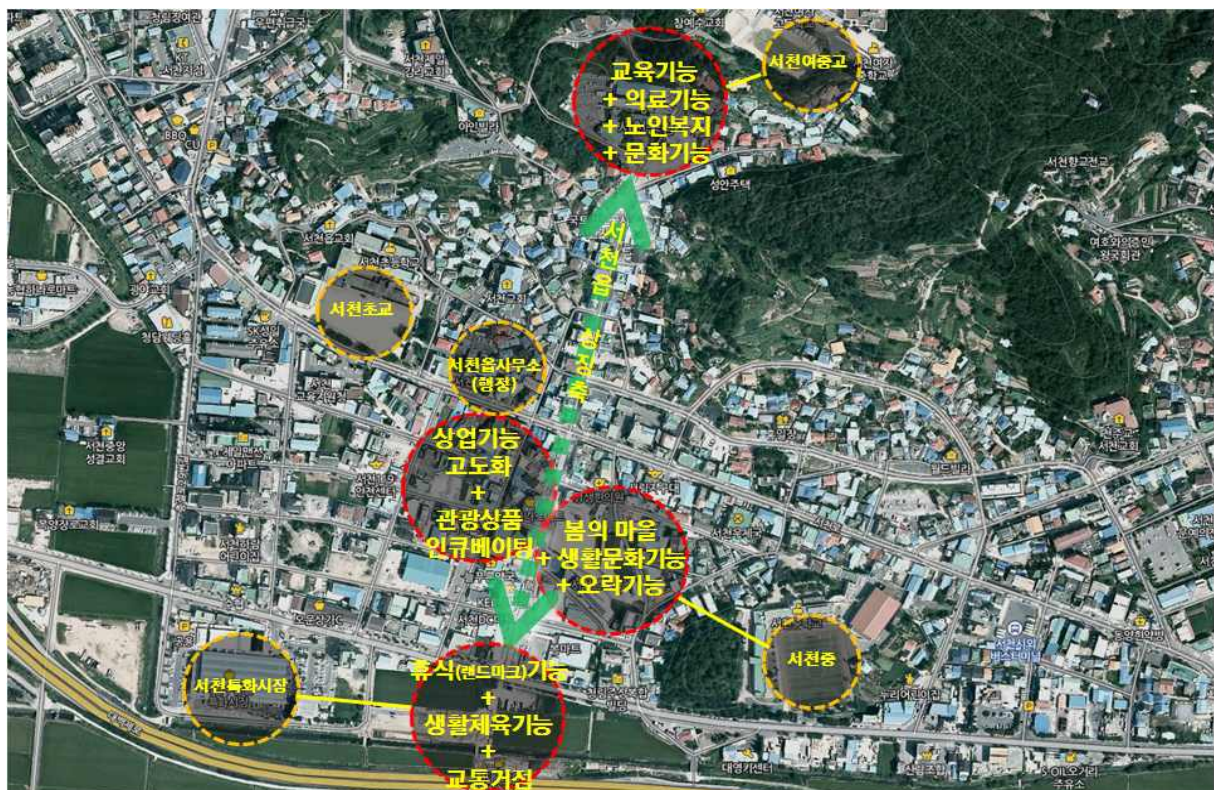
3. 현 주요 거점별 특화 방향

현재의 기능을 유지·강화하되
시가지내부는 도보권내에서 개별공간을 특성화하고, 연결하는
다거점 네트워크 공간구조로의 전환
- 기능 분담에 의한 분산적 집약화 -

현)서천군청사 - 상업지역 - 봄의 마을을 연결하는 중심축을 설정하고, 구심력을 유지·확대

- [전제] 대중교통, 자가용이 중요한 교통수단인바, 주차장의 정비된 복합공공시설,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지역주민에게 큰 편익을 가져오게 됨
- [교육, 의료, 문화기능의 복합화] 현)서천군청사 부지 일원은 공공시설의 통폐합·재배치에 대응한 총량감축을 도모하고, 통폐합시설의 핵심 거점으로 구성함
 - 향후, 서천군청사 부지 일원에 조성이 가능한 분야는 주민 문화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이 그 대상이 됨
- [생활문화기능의 보완] 봄의 마을은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종합교육센터가 자리잡고 있으며, 서천읍의 문화1번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와 관련된 기능을 보강함
 - 생활문화와 관련된 기능은 생활예술가, 생활문화동호회 등 주민이 일상속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 이러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할경우에는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고, 현재 서천군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호회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함

- **[랜드마크 및 생활체육기능 보완]** 현 서천군청사와 마주보고 있는 남측은 아무런 기능이 없어서 상징축으로 기능하기 어려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으로 기존의 서천특화시장과 봄의 마을과 연계한 생활체육, 공원기능을 수행
 - 시설이용자는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배치
 - 서천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한 컨벤션 및 교육기능을 보완
- **[상업기능 유지를 위한 교통거점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인큐베이팅 기능 보완]** 현 서천읍의 상권규모는 중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요층이 고령화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기능 부여가 필요
 - 서천읍의 상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의 보전 및 증가를 고려하여야 하는 바, 교통관련 집분산기능을 수행하는 서천시외버스터미널의 종합터미널화하여 남측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 또한, 저발전지역일수록 관광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고도화하고, 서천읍 내부로 도시관광을 유인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이 필요



4. 전체 네트워크 구상

- **[동서 방향 - 도심교통, 남북방향 - 보행로 중심의 상징축]** 향후 서천읍의 거점별 네트워크는 크게 서천읍 중심부와 새롭게 조성되는 군청사로 나뉘는 가능성이 높음
 - 동서방향으로는 도심통과교통과 자동차교통 중심의 외곽순환교통체제를 마련
 - 남북방향으로는 현)서천군청사와 중남부를 연결하는 상징가로축을 형성
- **[남북간 상징축은 보행중심으로 개편]** 남북방향은 서천읍의 핵심축으로서 상권유지, 공공공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행중심으로 개편
 - 보행자 수요를 고려한 보행공간 확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인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전거 이용 부담률을 제고
 -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입한 도로 설계, 보도의 연결성 확보 및 보도 포장상태 개선 등을 추진
- **[교통 결절점 및 승하차장의 보완]** 서천읍의 상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보완
 -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한 곳은 서천읍 동남부에 치우쳐 있는 바, 이를 중남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또한, 서천읍내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대책 마련]** 도심내부의 서비스기능 제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유흥지 및 노후 건축물을 활용하여 주차수요에 대응
 - 특히, 현)서천군청부터 이어지는 군청로와 서천로의 교차로까지의 2차로 구간에 입지한 업무시설은 군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능으로 향후 군청사 이전시 동반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인근의 주거지역은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이므로, 군청로에 연접한 건축물은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주민 주차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신교통수단 도입과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정립]** 도시관광과 학생의 자전거교통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과 녹색교통체계 마련
 - 통행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동차 중심의 도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서천군청사와 서천특화시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활용하고, 신교통수단 적극 도입을 검토하여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마련
 - 주요 거점별, 버스정류장, 학교를 중심으로 자전거 교통을 적극 도입하고, 서천읍내의 도시관광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전거 환승시설 등을 고려

- **[승용차 분담률 대중교통으로 전환]**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 연계교통망 정보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통합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으로 실시간 버스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켜 승용차 분담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및 도심혼잡 완화에 기여

04 주요거점별 계획과제

1. 현)서천군청사

1) 방향

- 군청사 이전에 따른 대체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기능이탈로 인한 피해를 상쇄
-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기능 및 저성장체제하에서 공공시설의 통폐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
- 서천읍의 정체성 발현, 비전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상징공간으로 조성

2) 계획과제

- 서천읍성의 정체성 발현 공간으로서 문화재 관련 성곽, 역사공원으로서 조성
- 보완기능으로서 주민문화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을 보완
- 문화재관련 법적 제약으로 인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및 저밀도의 건축물 조성
- 제도적·재정적 한계로 인한 마스터플랜 설정 후 단계적으로 점진적 추진

3) 추진 가능 사업 예시

역사공원 조성

- 성벽 정비, 멸실 성벽구간 공원화, 관아 등 유적 복원·정비, 서천읍성 역사관 조성

문화·교육시설 조성

- 문화시설의 최근 동향은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밀착화, 도시 마케팅적 요소의 적용,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 추세, 도시의 폐,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형태로 진행됨
- 서천읍내에서의 접근성을 고려시, 접근이 가능한 문화시설은 문화기반시설과 유사문화시설로 나눌 수 있음

접근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유형

구분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유사문화시설
1차(5km이내, 소생활권)		복지회관,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사설문화센터, 아동센터
2차(10km이내, 중생활권)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센터
3차(20km이내, 대생활권)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청소년수련시설, 체험학습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적용 방안 연구

관련법상 문화시설 분류

구분	내용	비고
문화예술진흥법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연시설(문예회관, 공연장, 영화관), 지역문화복지시설(구민회관, 문화의집), 문화보급전시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전문문화시설 -문화시설 총람 조사 대상
지역문화진흥법	(a) 포함,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그밖에 주민 생활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생활문화시설 -사회적 개념 포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연구원(2016), 농촌중심지 정비방안 및 계획기법 현장실증연구

문화시설의 법적 종류

구분		근거법	규정	비고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조성 가능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조성 가능

문화시설의 법적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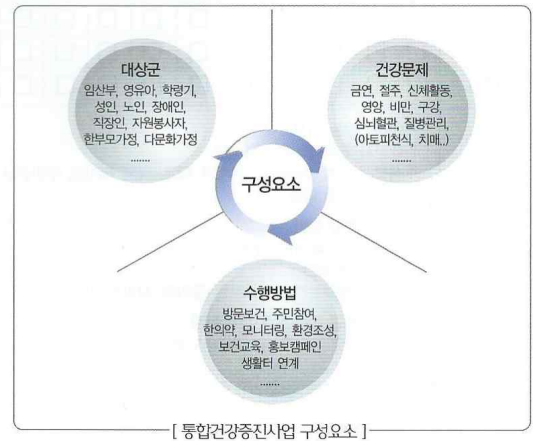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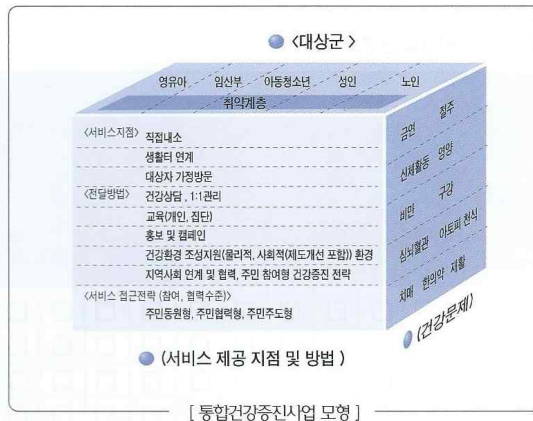
구분		근거법	규정	비고
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조성 가능
공연시설	문예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등의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	공연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소	
	영화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구민회관	지방자치법	구민의 종합복지 및 편익시설의 제공, 문화의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문화의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이전 가능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국악원	문화예술진흥법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조성 가능 (중고제)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조성 가능 (중고제)

자료 : 김효정(2014), 문화시설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의료시설 조성 : 이전 조성

- 서천군보건소는 1954년 발족하여, 1999년에 현보건소로 완공되었고, 그 규모는 6,627㎡, 3층 2,552.96㎡이며, 서천읍 사곡길 26번지에 위치하고 있음
- 주민건강증진센터는 2014년에 지상2층 729.42㎡의 규모에 1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 2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위치함
- 보건소의 속성상 응급센터 기능이 없고, 예방과 감염관리, 진료검진이 주를 이루므로, 서천읍의 인구 유동량이 많고,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위치함이 타당
- 특히, 보건소의 건강증진기능은 그 대상군이 영유아, 임신부,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취약계층으로 일정 특정군에 국한되지 않는 바, 접근성이 유리하고, 서천읍의 다목적 통행을 유발하는 데에 유발요인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군 및 구성요소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

중앙 공공기관 지사 및 산하기관 이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321개의 공공기관이 있음
-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개, 기타 공공기관 202개가 있음
- 서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사 및 산하기관을 집중 배치하여 공공기관이 집적된 행정타운으로 조성

구분	관계부처	기관명	비고
시장형 공기업 (14개)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구분	관계부처	기관명	비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분	관계부처	기관명	비고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타 공공기관 (202개)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3),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척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구분	관계부처	기관명	비고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공공기관 현황' 참고(2017. 4 기준)

공동체 사업 총괄 본부 :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화와 더불어 통합시설로 조성

- (행자부)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희망마을, 도서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 공동체 정원사업
- (농림부) 중심지, 마을단위, 권역단위 사업, 색깔있는 마을, 체험휴양마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농촌공동체 회사
- (국토부) 도시재생지원센터
- (문체부)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지원
- (고용노동부) : 사회적 기업
- (환경부) : 자연생태 우수마을
- (해수부) : 어촌특화발전 역량강화, 어촌체험마을

일자리 관련 총괄 본부 : 각 분야별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교류, 협력, 교육장소로 조성⁶⁾

- (사회적 경제, 3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 (공공행정, 36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산불감시원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숲가꾸기사업, 산림서비스도우미(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산림서비스도우미(숲 해설가), 산림서비스도우미(숲 생태관리인),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체험지도사),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 코디네이터), 산림서비스도우미(도시녹지관리원), 산림서비스도우미(학교숲 코디네이터), 산림재해모니터링, 도농교류 활성화(농촌), 도농교류 활성화(어촌), 해안가 쓰레기 정화,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귀농인상담인력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충남형 문화예술단체 청년인턴 채용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문화재 상시관리활동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전일제

6) 제시된 사업, 프로그램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천군의 현실과 다를 수 있음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해설사 활동비 지원, 문화단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사업,
도립공원 관리원 배치, 친환경건강도우미사업

- (복지서비스, 24개) 다문화가족행복가꾸기사업(어울림사업),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자녀언어발달지원),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룹홈 아동보호, 아동복지교사 지원, 장애인 민원상담소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어린이 전담관리원 및 시니어 감시원)
- (복지서비스 연계, 24개)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충,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활성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및 행복경로당 확대운영,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충청남도 노인회관 건립, 장애인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보훈 애국공원 건립,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 집 설치 확대
- (저소득층, 7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드림스타트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관리,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중심 자활사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노인층, 2개) 어르신 일자리 지원, 실버환경봉사단 운영
- (장애인, 3개)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 (여성, 4개) 다문화이주여성 활용 외국어교육 확대, 농가도우미사업, 새일여성 인턴, 결혼이민여성 인턴
- (청년층, 6개) 창업어가 후견인제 및 수산업 인턴제,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도립대학생 해외인턴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사 가축방역 예찰지원
- (직업능력개발, 26개) 일취월장123,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시도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예상),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지역혁신거점사업, 충남SW융합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RIC),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역연고산업(RIS)육성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지역특화산업(주력산업) 육성지원, 자동차의장전장고감성시스템개발육성,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어업인전문기술교육, 귀농창업보육센터운영,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 농산물가공전문인력양성, 전문농업인교육, 3농혁신대학운영,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농촌지역리더양성, 귀농대학운영, 농업인대학운영

- (고용서비스, 8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희망이음프로젝트, 지역노사민정활성화사업, DVCE행사(취업박람회등),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 지원,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설치
- (고용장려금, 1개) 고용우수기업인증사업
- (청년창업지원, 6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ceo프로젝트, 작은브랜드100개찾기프로젝트, 창업보육센터(BI)지원, 마을단위농식품기업창업육성, 지역단위농식품기업육성
- (일자리 인프라 구축, 518개) 충남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충남고용포럼, 충남지역 대학취업지도자협의회, 지역인재유출방지를 위한 시군별 산학관 WIN-WIN 일자리지원협의체 운영, 취업지원기관 통합합동근무제 추진, 고용복지HRD융합서비스 지원체제 운영, 충남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고용센터-충남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공동 추진, 민·관 협업체제 강화, 일자리사업 융복합 추진, 찾아가는 WIN-WIN 코칭 및 코칭워크숍 추진

2. 현)서천군청사-서천로 교차로-군청로 남측 일원

1) 방향

- 군청사 이전에 대응한 주민의 가로 유동량 보전 및 확대
- 군청사의 서천읍성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한 상징가로로 조성
-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의 공실률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

2) 계획과제

- 군청사 이전시 동반 이전이 예상되는 가로변 건축물의 매입 또는 관련 기능 재이전
- 교통 정온화와 더불어 가로변 보행공간의 확대
-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를 통일된 외관으로 형성하기 위한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협정사업의 추진 및 재원적 지원
- 주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공간의 확충과 활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 운영

3) 추진 가능 사업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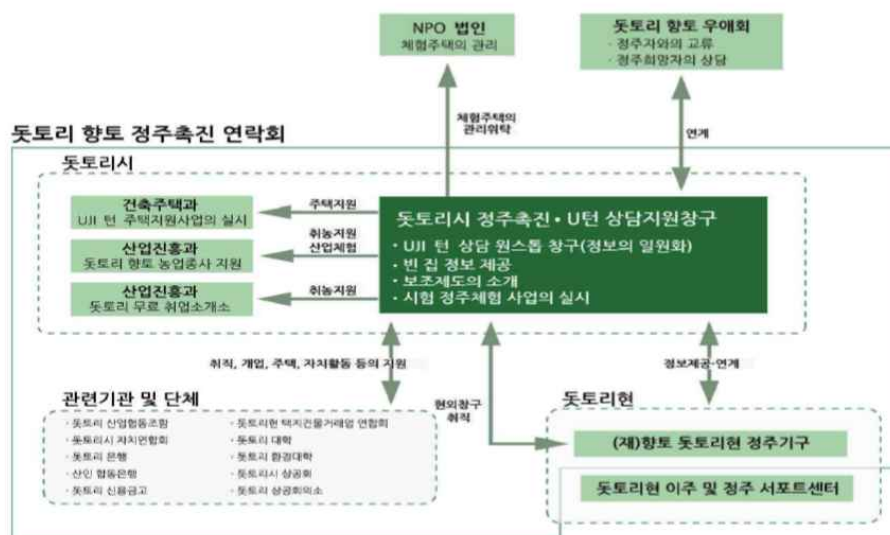
주민참여 경관 개선 · 협정사업의 시행(주변 주거지 포함)

- 공공주도의 일방향적인 경관 형성은 주민에게 수동적이고, 공공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공공 의지하려는 성향을 배가할 수 있으므로, 공공주도의 일방향적인 경관개선은 지양하고, 주민에게 애착을 갖는 공간으로 재생산하고, 불량한 경관을 주민에 의해서 개선하려는 주민참여형의 경관개선 프로젝트 추진
 - 지역 주민과 상인이 주변 경관에 관심을 갖고 경관개선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경관에 대한 관심 고조와 자발적 개선활동 유도
- 총괄진행을 맡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대상지별 팀을 구성하여,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소단위 주민공모사업의 시행
- 필요시,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겸하여 시행하고, 서천군 경관조례에 의거한 경관협정사업으로 발전 추진

공실을 저하, 빈점포·공가의 적극적 활용

-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기존의 HW중심의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보완코자 장소중심적·통합적 지원을 통한 활성화와 민간투자·지역사회 참여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와 유사한 공가, 공점포 등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일본의 SW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이 있음
 - 사회자본 종합교부금 지원에 의한 교외의 거주인을 내부로 정주하려는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거주체험등을 실시(일본 후쿠오카현 안심이주 정보뱅크 및 돗토리시 UJI턴 촉진사업)
 - 챌린지 숍 : 자영업 무경험자, 창업다에 대한 빈점포 활용 지원, 영업노하우 등 교육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대부분의 일본 지자체)
 - 공통 주차 서비스권 사업 : 대형점, 상가 등과 함께 사용가능한 공통 주차서비스권 시스템 운영
 - 육아 기능 보완 : 빈점포를 이용한 “가맹방식”의 공통 탁아소 정비를 추진하고, 인근 점포 근로자의 육아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비용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 등을 통한 소비환경 유발을 고려

돗토리시 UJI턴 촉진사업 정주지원 체계도



자료 : 후쿠오카현(2010), 후쿠오카현 안심이주 정보뱅크의 대처 토지주택연구원(2015),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도시 교통을 고려한 차량대체 노선 마련 및 가로변 보행공간의 테마화와 점진적 확대

- 과거 공공에 의거한 가로공간의 확대는 물리적 공간 확대 비중이 높았으며, 수요와 타당성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시설확충에 매몰되는 현상이 지속됨
 - 이러한 일련의 보행공간의 확대코자 하는 사업은 보행공간의 확보와 자동차 교통의 원활화의 대립이 발생하고, 보행공간보다는 자동차 교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대구 등 보행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중임
- 스페인 폰테베드라시(82,946명(2014), 117km²)는 도심지역에만 차량통행을 금지시켰으며, 이를 위해 8만대 규모의 무료주차장을 조성하고, 도심으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는데 15년이 소요됨
 - 1990년대 말 인구 6만여명의 소도시는 출퇴근 27천대의 차량과 도심은 차량중심으로 안전상의 문제에 도달하면서 1999년 ‘차없는 도시(Car free city)’를 선언함
 - 이후 도보로 10분 거리인 곳을 지정하고, 불법주차와 200유로의 벌금을 강제 부과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함
 - 이후, 도심내 차량이 없어짐에 따라 인구는 2만여명이 증가하였고, 범죄 발생건수도 484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생활패턴이 바뀌고, 골목 상권이 회복됨에 따라 이러한 개혁을 이끈 시장은 5번이나 연임할 정도로 인기가 높음
- 서천읍의 경우, 도심으로의 통과교통이 왕복2차선에 의해서 동서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남북방향으로는 4차로 통과교통이 이루어지는 한편, 도심내에서는 교통여건에 따라 새로운 개편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사회계층과의 다양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것은 각 이해단체가 제기하는 각론보다는 사회계층 전반에 대한 총론적 입장에서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 현재 서천군청-서천로까지의 약 300m구간은 보행자구간으로 조성시 본 구간이 외통길로서 주변의 교통량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고, 주변의 교통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사업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3. 봄의 마을 일원

1) 방향

- 주민의 생활문화를 충족하기 위한 기능의 보완
- 청소년의 야외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오락기능의 보완
- 봄의 마을을 허브로 하는 자전거교통의 네트워크 구축

2) 계획과제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천읍 관련기능, 프로그램의 통합화
- 청소년의 밝은 미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야외스포츠 등의 관련시설 보완
- 학령기 인구 및 부모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자전거 교통망의 확충

3) 추진 가능 사업 예시

생활문화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동, 통합 및 개편

- 생활문화는 주민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비전문성에 기반한 주민의 주체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자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의 통합이 요구됨
 - 이러한 기능은 서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람, 공연 중심의 문예의 전당과는 기능적, 프로그램적으로 궤를 달리하며, 주민센터 수준의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와 소형문예회관 수준인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겸하는 내용임
 -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는 서산생활문화센터(330㎡), 동두천생활문화센터(240㎡), 거창군 하성생활문화센터(195㎡)등이 있음
 -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는 수원생활문화센터(2,083㎡), 장수생활문화센터(1,233㎡), 부산 수영구생활문화센터(3,570㎡) 등이 있음

생활문화란?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
- 다시 말하면 주민이 직업적이나 전문적이 아닌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노래나 연극, 춤, 서예, 회화 등의 문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

기존 문화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의 차이점

구분	기존 문화시설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목표	관람중심의 문화서비스	주민들의 체험·창작활동 지원
조성방식	신규건립방식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방식 기존 문화시설 활용 방식
	관중심의 공급방식	민간중심의 자율적 공급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기반한 탄력적 시설구성 및 지원
운영방식	공공 소유 및 공공 운영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운영
프로그램	강좌형-관람형 프로그램 중심	동호회 등 생활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자재 제공 체험 및 창작 프로그램 중심
인력운영	전담인력 중심	주민 강사 및 지역활동가 양성
지원방식	건립비 지원	리모델링 비용, 시설 및 기자재 비용지원
이념	문화 민주화	문화민주주의, 자율성, 공공성, 자생성(지속성)

자료 : 생활문화진흥원(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 길잡이

● 기본공간은 주민공동체 공간, 주민 자율공간, 다목적 홀, 공연장으로 구성⁷⁾

- 공동체공간 : 주민 공동체공간의 도입공간으로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상호교류, 휴식 외에 모임 및 회의, 교육, 소규모 발표, 체험 활동 등의 다용도 공간이 이에 해당
- 주민자율공간 :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위한 창작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교육 활동, 회의 및 모임활동 등으로 창작실, 강의실, 연습실, 회의실 기능을 포함

7) 이하는 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 길잡이를 요약 정리함

- 다목적 홀 : 각종 전시, 공연, 발표회를 위한 생활문화센터의 발표공간과 영상관람, 교육 프로그램, 주민모임과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 공연장 : 다목적홀과 달리 공연 전용공간으로 시설과 설비면에서 전문 공연장이라 할 수 있음
- 특화공간은 공동체 부엌, 스튜디오, 공동체 공방, 야외공연장 및 활동공간, 유아놀이방 등이 있음
- 공구도서관 : 오래된 주거지역의 경우 집수리 등에 활용가능한 공구 대여소, 목공공방 등과 연계
- 북카페 : 주민들의 자율적인 카페 이용, 마을도서관과 마을 부엌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계 구성
- 학습실 :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개인학습실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작은 세미나실을 계획하여 젊은층의 생활문화센터 활용도 제고
- 이와 같은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으로 신청 가능

청소년활동진흥원(KYWA)급의 활동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강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수련시설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평창),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김제),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고흥),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영덕) 등이 있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서울시 서대문구에 자리하고 있음
- 이러한 시설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 방과 후 돌봄서비스인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단 운영” 등을 시행중에 있고,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국수준으로의 레벨 업이 요구됨
- 전국 시설과 견주어 서천군에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시설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국제교류기능 : UN사무실 및 각국 체험장 등
 - 실험실 : 식품실험실, 융합실험실, 온실 등
 - 유희시설 : 전망대, 망원경, 천체망원경 등
 - 체육관 : 실내수영장, 농구배구장, 스킨스쿠버장 등
 - 야외시설 : 축구장, 우레탄트랙, 야영장, 모험놀이, 협동훈련장, 인공암벽, 민속놀이 시설, 활터, 수상훈련장, 숲체험코스 등

4. 상업지역 일원

1) 방향

- 상업기능 유지를 위한 접근성 변화와 관련된 일련의 교통체제 강화
- 상업기능 고도화를 위한 Start-up, Scale-up관련 기능의 제고
-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서천군 관광상품 다양화

2) 계획과제

- 도심의 기능 유지를 위한 주민의 이동량 보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집적화
- 내지인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서천읍으로의 유입인구 증가를 위한 소구전략 마련
- 서천읍내 역사문화관광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

3) 추진 가능 사업 예시

주민의 다목적 통행을 유발, 유지하기 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민 유동량 보전

- 내지인의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한 버스정류장 등의 설치
- 관광객을 위한 중심시가지 순환버스를 운영하되, 서천읍 외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도시관광의 특성인 도보 유람성 해결을 위해서는 서천읍내의 관광명소에 대한 순환 체계가 동시에 마련이 되어야 함과 더불어 시설적인 면에서는 저층식 타운버스 운영, 정류소, 사인 설치, 차량 등의 환경정비 동반되어야 함

Start-up, Scale-up으로 (재)창업생태계 기반 마련

- 서천군청사 이전 신축시 음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동반 이주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상권 축소 및 기능 이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일본에서 빈점포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⁸⁾
 - (돗토리현) 빈점포 활용 상업자 육성을 위해 창업희망자 등 대상 임차료·관리비 무상 또는 저액 대출, 계약기간 6개월, 갱신 한도 5회(최장 3년 간 임차 가능), 1년차 임대료 : 주변 점포의 1/3, 전문가 파견 또는 연수 등 지원, 경영 컨설팅
 - (아키타현)은 빈 점포 활용 사업자에 대해 출점 관련 경비(개장비, 선전광고비, 설비 임대료, 사례금 등), 일부 보조(타 지구는 개장비만 지원), 중심시가지내 대형상업시설의 빈 점포 출점시, 임대료 일부 보조
 - (츠루오카시) 빈 점포를 활용, ‘기업 가맹 방식’의 공동 탁아소 정비 사업, 근로자의 보육환경 개선, 기업 공동 가맹으로 기업 부담 경감, 중심시가지내 설치를 통해 방문인구 증가, 소비유발효과 제고
 - (마츠에성) 지역의 보물(자원) 발굴 및 마을 걷기 지도 작성, 작성 지도는 시청 분청, 역전 관광 안내소, 마츠에 역사관, 각 공민관 등에서 제공,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가능
- 기존의 (재)창업, 재창업 생태계에서 비판을 받는 것은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여 창업활동을 하더라도, 그 업종 대부분이 음식업에 집중되고 있고, 영업지속성이 매우 짧다는데에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과 더불어 초기 정착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교육 및 컨설팅 : 창업과 관련된 필요 교육 실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정부지원사업 연계
 - 초기 정착지원 : 마케팅 및 판로지원, 창업공간 및 시설지원, 선배CEO 및 입주기업 대표의 노하우 전수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판로지원(제품홍보, 제품 디자인, 판로개척 등 시행) : 마케팅,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단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지역 내 유통업체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한 해외 판매지원
 - 사업화지원(경영, 마케팅, 컨설팅으로 기술사업화 시행) : 스타트업 비즈프로그램 전문가를 통한 경영 및 마케팅 분야 지원, 사업자 등록 및 벤처기업 인증, 시장분

8) 일본 사례는 토지주택연구원(2015),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을 재정리

석, 판로 지원 등

- 기술개발(시제품 개발, 자인개발지원사업, 기술개발 멘토링 시행) : 대학 및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유한 공동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개발 지원, 교수 및 스타트업 비즈프로그램 전문가의 기술지도 연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창업, 인허가(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 행정지원과 창업준비 공간지원) : 창업준비실, 회의실과 컴퓨터, 프린터기 사무용 집기류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창업지원 정보 제공
- 창업교육(성공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실시) : 유망창업자 및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창업마인드 고취와 경영기술습득을 위한 전문교육과 창업자의 사업운영 및 실무능력 활용교육과 모델해저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한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운영도 함께 도모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행정, 경영, 마케팅, 사업화의 분야에서 적시적인 대응이 함께 지원되어야 함
- 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발굴과 창업활동 지원으로 창업자의 지속적 육성 및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성장 지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귀촌/귀농인, 주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기초지식 배양을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우수 창업인재로 육성, 지역 내 창업지원 인프라를 창업 준비자 및 창업자에게 제공하여 성공 창업 유도, 지역이 보유한 특허 및 기술 등을 제공하고 멘토단(교수, 전문멘토, 창업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활용을 통해 창업 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우수 인력을 활용한 전문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기술지도 체계 구축,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전문장비와 설비, 시험 및 측정기기를 구비 또는 대학 공동장비 연계지원, 제품디자인관련 전문가 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생산품의 품질안정 및 품질인증관리, 불량품 감소 등의 생산 공정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우수 인력을 활용한 전문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창업자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지식재산권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자문 및 출원, 등록 지원,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교육 및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활용
- 교육지원 : 기술창업학교와 연계하여 창업이론 교육 및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 대창업보육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주기업 교육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각종 경영스킬 교육

- 판로지원 : 마케팅,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단 및 판로개척지원, 각종 국내외 전시회 및 카탈로그 제작지원, 전국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한 공동 마케팅 또는 판매전시장 개설, 지역 내 유통업체와의 연결을 통한 공동판매망 구축등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지원 기관을 이용한 수출대행도 고려
- 경영지원 :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스타트업 비즈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창업절차, 경영교육, 시장조사, 기술사업화 전략 지도 등 창업자별 단계별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 자금계획을 포함한 재무 관리 지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연계한 세무·회계 지원,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및 재고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시설 및 인프라 지원 : 경영에 필요한 업무용 작업 공간 제공, 사무장비 및 집기류 제공, 부대시설(비즈니스룸, 공동 회의실 등) 지원

서천군 관광상품 인큐베이팅 센터의 조성 및 운영

- 위의 창업관련된 사업(시책)을 현재 서천군내의 각종 관광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에도 적용시행
- 관광유형별 상품개발, 컨설팅, 창업자·종사자 전문인 양성 등의 관광비즈니스 플랜 마련 및 시행

5. 군청로 남측 일원

1) 방향

- 서천읍 상징축 시종점으로서의 역할 제시
- 주변 봄의 마을, 상점가, 서천특화시장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강화
- 현재, 서천읍에 부족한 기능을 완충과 미래 지향적인 기능의 보완

2) 계획과제

-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능 및 추진방식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
-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경우, 관련 기능과의 연계성, 차별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 부지가 갖는 규모성, 법제도적 합리성에 대한 선해결

3) 추진 가능 사업 예시

서천읍의 생활체육기능 보완

- 서천읍에 현재 부족한 기능은 생활체육기능임
 - 생활체육기능은 현재 마서면일원에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이는 서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체육시설이고, 일반 주민이 종합운동장으로 접근성은 열악함
- 일반적으로 군지역은 생활체육과 관련된 체육회가 보통 40-50여개가 활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천읍민과 관광객을 위한 생활체육기능의 보완은 필요함
 - 조성코자 하는 시설은 수요적 타당성을 선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과의 기능적 중복성을 선해결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천읍민, 서천군민의 수요가 전제되어야 하고, 경영수익모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탁구, 스쿼시, 에어로빅, 볼링, 농구, 배구, 클라이밍 등
- 초중고 및 동호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활용도를 제고
- 군민에게 건강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1종목 생활화 및 동호회의 통합지원
- 가족단위 체육대회 프로그램 등 가족, 동호회, 개인, 연령,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개설
- 특히, 마서면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고려
예) 탁구장, 에어로빅실, 스쿼시장, 클라이밍실, 볼링장, 선수대기실, 샤워실, 워밍업실, 관중석, 본부석, 장애인석, 매점, 휴게공간 등

서천버스터미널 이전 및 주차시설 확충

- 서천버스터미널은 서천읍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의시설부족과 불편함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현재의 서천시외버스터미널은 서천읍 시가화 중심지로부터 약 500m(도보 8분, 자전거 3분), 서천수산물 특화시장 주변 상권까지는 약 800m(도보 15분, 자전거 4분)가 이격되어 있음
- 현재는 시티투어의 출발점으로도 설정되어 있으나, 교통의 중심지인 서천읍과 장항읍을 연결하는 정도이며, 이외의 관광지는 연결하지를 못하고 있음. 또한 서천읍내의 중심상점가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노선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됨
 - 시티투어 노선 : 서천버스터미널(1차탑승)-서천종합관광안내소(2차탑승) - 문헌서원 - 장항역(3차탑승) - 장항 시내(중식) - 서천특화시장 - 솔바람길, 스카이 워크 - 국립생태원 - 장항역(하차) - 서천종합관광안내소 - 서천버스터미널
- 따라서, 서천읍 상징가로와의 연결성 확보, 주변 상권과의 승수효과 제고, 서천특화시장 물품구매의 원활한 수익성 확보 등을 고려할 경우, 과감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향후 전개될 교통시설의 복합화, 교통체계의 스마트화를 고려시에는 복합터미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쇠락하는 도심상권의 유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서천군청 이전지 일원

1) 방향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과도한 도시개발사업은 지양
- 행정기능의 이전과 더불어 동반이전의 최소화를 고려
- 과도한 개발로 인한 도시공간구조의 왜곡화를 방지

2) 계획과제

- 인구규모 대비, 적정 도시개발사업부지의 설정
- 행정기능의 이전과 더불어 상업기능의 입지를 제한토록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 근린상업기능의 이전에 대한 용도지역의 세분화

3) 추진 가능 사업 예시

행정기능과 밀접한 업무기능의 이전은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의 상업기능만을 유지

- 행정기능과 밀접한 행정민원과 관련된 업무기능의 동반이전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지만, 규모성이 약한 상업기능의 동반이전은 고려할 경우, 그 입지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서천읍 도시지역 확장,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2017년부터 조사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음
- 현재, 예정된 기능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행정과 주거기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기능의 완료시까지의 상당히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순수유입인구를 1천명(2020), 3천명(2025)명으로 예측
 - 주택용지 : 행복주택(10,000㎡), 공공임대주택(10,000㎡),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용지(5,000㎡)
 - 응급의료센터(5,000㎡), 119서천안전센터 이전(2,000㎡), 유치원, 초등학교 용지(10,000㎡), 군립어린이 놀이터(4,000㎡) 주민복지시설(3,500㎡)

참 고 자 료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공공기관 현황’ 참고(2016.8.31. 기준)
- 김선기외(2012),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추자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9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연구원(2016), 농촌중심지 정비방안 및 계획기법 현장실증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적용 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
- 상권정보시스템(2017.4)
- 생활문화진흥원(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 길잡이
- 서울시(2013),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
- 서천군(각년도), 서천 통계연보
- 서천군(2014), 2020년 서천군 관리계획
- 서천군(2016), 2025 서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 서천군청 내부자료(2017)
- 이용우외(2014), 미래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 국토연구원
- 토지주택연구원(2015),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후쿠오카현(2010), 후쿠오카현 안심 이주 정보뱅크의 대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년도), 지역발전지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문화시설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 Land Brandenburg, 1995, Landesentwicklungsplan Brandenburg: Zentraloertliche Gliederung LEPI, 10-11